

## 민주연구원 '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쟁' 정책브리핑 발간

- 내국세 20.79% 연동은 의무교육 재정을 보호하는 사회적 합의이자 제도적 안전장치
- 재정의 안정성·효율성·책임성을 함께 높이는 교육재정 개혁 추진해야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이재영)은 『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쟁 - 재정효율화를 추진한 해외 교육재정 개편 사례의 교훈』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.
  - 이번 정책브리핑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.79% 연동방식을 개편하려는 논의를 검토하고, 영국·미국·일본의 교육재정 개편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했다.
  - 정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내국세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가 교육비용의 같은 비율 감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내국세 연동 폐지가 의무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.
-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“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.79%는 비효율의 숫자가 아니라, 미래세대와 지역의 교육기회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합의이자 제도적 약속”이라고 강조했다.
  - 이어 “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교육재정 개혁은 국민이 맡긴 재원이 학생에게 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재원 배분과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”고 밝혔다.
- 브리핑은 내국세 20.79% 연동방식이 단순한 재원 배분 공식이 아니라, 경기변동과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변화에도 국가 의무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.
  -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생수 증감률을 반영하면 저성장과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투자 증가 역제로 자동 전이될 수 있으며,
  - 현 정부가 일정한 재정 규모를 보장하더라도 연동 원칙이 폐지되면, 향후 정부의 재정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보장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.

- **브리핑은 학생 수가 감소해도 교육재정 수요는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분석했다.**
  - 교육은 학교라는 물적 기반과 교원 등 전문 인력을 통해 제공되는 노동집약적 국가 필수 공공서비스로, 학생이 줄어도 교원인건비·급식·통학·시설·안전관리에 필요한 기본비용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으며
  - 고교학점제, 특수교육, 기초학력, 돌봄·상담, 학생 정신건강, 노후학교 개선과 인공지능 교육 등 새로운 재정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
  - 학령인구 감소를 산식에 직접 반영하면 농산어촌에서는 학교 통폐합과 통학권 약화가, 수도권과 신도시에서는 과밀학급 해소 지연과 학교 신설 차질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.
- **해외사례는 재정효율화를 목표로 한 교육재정 개편이 교육여건 악화와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져 정부와 집권당의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**
  - 영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학생 1인당 실질 학교지출 변화가 교직원 감축과 학생 지원 축소로 이어져 교장·학부모의 사회적 저항과 선거 쟁점으로 확산되었다.
  -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의 교육재정 감축이 학업성취도와 대학진학률 하락, 지역 간 교육 격차 확대로 이어졌으며, 교육재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면서 교원 총파업으로 이어졌다.
  - 반면, 일본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을 기계적으로 감축하지 않고, 학생 1인당 투자를 확대해 교육여건을 개선하였다.
  - 이처럼 OECD 국가에서 재정효율화를 위해 의무교육 재정을 개편한 사례는 대부분 재정위기 상황에서 추진되었으며, 교육여건 악화와 교육격차 확대 등의 부작용으로 이후 교육투자를 다시 확대하거나 복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.
- **정책브리핑은 민주당의 교육재정 개혁이 안정성·효율성·책임성을 높이고, 전 생애에 걸친 국가 교육투자 총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.**
  - 내국세 연동방식을 유지하되 안정화기금 운용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·효율성을 강화하고, 재원 배분에는 학교·학급 수, 소규모학교의 고정비, 과밀학급 등 지역별 교육수요를 반영해야 한다.
  - 영유아·고등·평생교육 투자는 초·중등교육 재원의 이전이 아닌 국가 교육투자 총량 확대로 추진해야 하며, 개편에 앞서 장기 재정추계와 교육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.
- **브리핑을 작성한 이경아 연구위원은 “이번 논쟁의 핵심은 교부금 증가율 조정이 아니라, 국가가 의무교육 재정을 어떤 원칙과 수준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”고 설명했다.**
  - 이어 “영유아·고등·평생교육 투자 확대가 국가 의무교육 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단계 간 재원 경쟁이 아니라, 생애 전반에 대한 국가의 교육책임과 교육투자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- **정책브리핑 전문은 민주연구원 홈페이지(<https://idptheminjoo.kr/>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/끝/**